

2021 인천경제주권 어젠다

2021 Incheon Economy Sovereignty Agenda

2021. 11.



All your Business, 인천상공회의소와 함께!

2021 인천경제주권 어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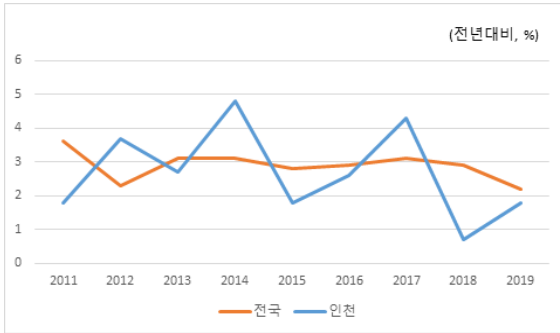
2021 Incheon Economy Sovereignty Agenda

202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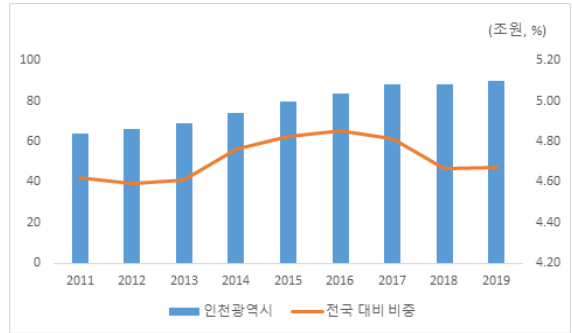


인천 경제, 산업 현황

■ 지역내총생산(GRDP)



[인천 실질 GRDP 성장률]



[인천 명목 GRDP 규모 및 전국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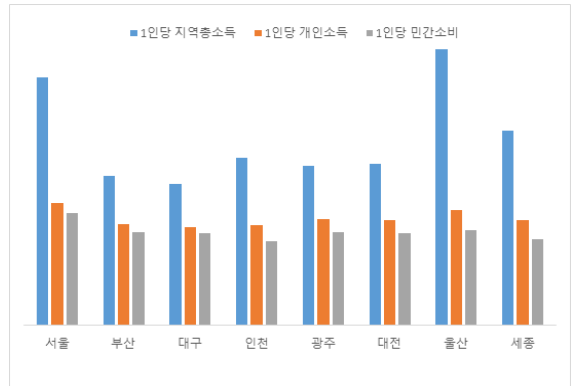
※ 출처 : 통계청, 2015년 기준년 가격

- 인천의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9년 1.8%로 전국 평균(2.2%) 하회
- 인천의 명목 GRDP는 2019년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로 2017년 이후 하락 추세

■ 지역소득 주요지표

(단위:천원)

구분	1인당 지역내총생산	1인당 지역총소득	1인당 개인소득	1인당 민간소비
서울	45,118	48,693	23,978	21,991
부산	27,577	29,259	19,723	18,134
대구	23,883	27,700	19,196	17,964
인천	30,584 (4위)	32,873 (4위)	19,582 (7위)	16,552 (8위)
광주	27,799	31,186	20,791	18,326
대전	28,561	31,566	20,648	18,115
울산	65,112	54,190	22,617	18,574
세종	35,802	38,186	20,674	16,845



※ 출처 : 통계청

- 인천은 1인당 민간소비와 개인소득은 낮은 편임.
- 소비위축 시 경제 불균형 발생과 경제회복 지연 가능성 높음.

▷ **최근 인천경기는 전국 대비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개인소득 기반이 취약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성장산업 육성 필요**

■ 산업단지 현황

(단위 : 년, 천㎡, 개사, 명)

구분		조성연도	조성면적	입주업체	가동업체	종업원수
국가 산단	남동국가산업단지	1997	9,574	7,047	6,892	103,426
	부평국가산업단지	1969	609	1,345	1,336	12,914
	주안국가산업단지	1974	1,177	1,124	1,115	11,972
일반 산단	인천지방산업단지	1973	1,136	556	556	6,905
	인천기계산업단지	1971	350	178	178	2,642
	인천서부산단지	1995	939	286	285	5,250
	강화하점산업단지	1994	59	15	8	81
	청라1지구일반산업단지	2021	194	34	34	787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2021	2,402	210	208	9,732
	검단일반산업단지	2021	2,251	960	924	10,967
	강화일반산업단지	2021	462	79	55	725
	서운일반산업단지	2021	525	70	56	2,796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2021	56	23	9	50
	I-Food Park	2021	262	77	24	1,065
	IHP도시첨단산업단지	2021	1,171	34	12	1,098

※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 인천의 15개 산업단지 중 조성 20년이 지난 노후화 산업단지가 7개(46.7%)
-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고도화 필요

■ 산업단지 업종 현황

(단위 : 개사, %)

구분	소재부품	장비	미해당	소계
계획입지 (산단 내)	8,015 (68.6)	1,412 (12.1)	3,676 (31.5)	11,688
개별입지 (산단 외)	3,107	612	1,747	4,854
합계	11,122	2,024	5,423	16,542

※ 출처 : 산업입지 ISSUE & TREND, 한국산업단지공단('20.03.)

- 인천의 15개 산업단지 중 조성 20년이 지난 노후화 산업단지가 7개(46.7%)

■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지역내 비중

(단위 :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비중	33.9	54.1	66.2	67.2	56.0	68.1	64.0	52.2	61.3	39.1	49.4	54.7	43.3	40.6	61.8	68.5	31.7

※ 출처 : 산업입지 ISSUE & TREND, 한국산업단지공단('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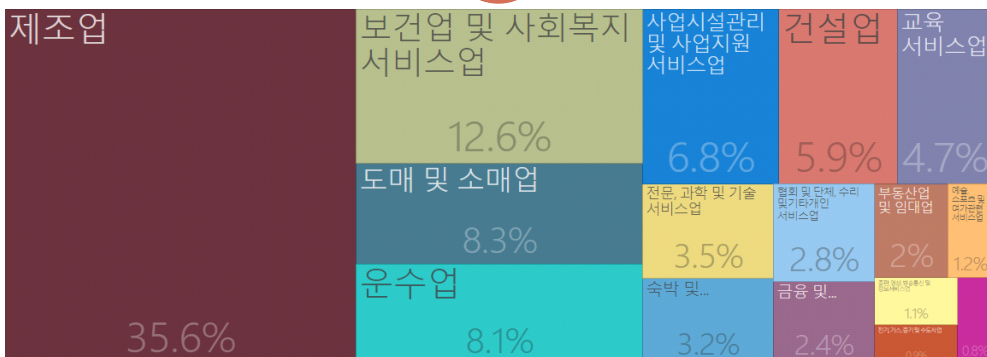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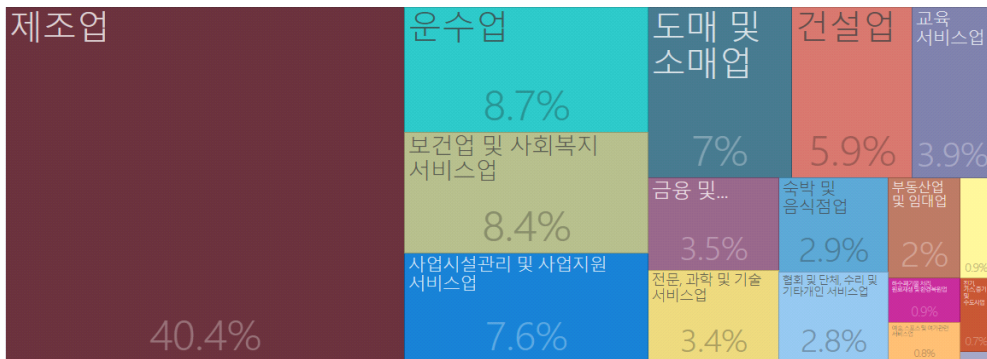
▣ 제조업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업체	전체(개)	186,011	191,568	196,705	202,493	206,244
	제조업(개)	24,200	24,246	24,826	25,235	25,190
	비율(%)	13.0	12.7	12.6	12.5	12.2
종사자	전체(명)	984,652	1,004,783	1,034,344	1,070,454	1,092,494
	제조업(명)	242,922	247,613	250,329	247,361	244,352
	비율(%)	24.7	24.6	24.2	23.1	22.4

※ 출처 : 인천데이터포털

- 전체 사업체 수 대비 제조업 수는 1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제조업 비중 감소중
- 전체 종사자 수는 증가 추세이나, 제조업 종사자는 감소 추세

▣ 인천 산업별 현황 (2013년 → 2019년)



- ▷ 제조업 비중이 크게 축소되고 서비스업 비중이 크게 확대되며, 산업의 서비스화가 빠르게 진행중
- ▷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제조업 고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필요

2021 인천경제주권 3대 어젠다, 9개 정책제안

I. 도시 경쟁력 강화

1. 수도권 규제 완화
2. 인천경제자유구역 역차별 해소
3. 지방자치권한 강화

II. 미래 성장기반 육성

1.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지원
2. 항공정비산업 및 공항경제권 구축
3. 수소에너지 기반 탄소중립도시 실현

III. 산업 경쟁력 강화

1.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2.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및 환경 개선
3. 전통 제조업 지원

2021 인천경제주권 어젠다 요약



수도권 규제 완화

- 인천 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공장 입지, 도시 개발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음.
- 초광역 경제·생활권을 통한 광역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전면적인 개정과 유턴기업의 수도권 규제 폐지 필요.
- 2020년 점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도 강화군, 옹진군 등은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전국 대비 인천의 GRDP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음.



인천경제자유구역 역차별 해소

-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첨단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되고 있으나 경제자유구역에도 각종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법 개정 필요.
-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첨단·핵심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가 제공되나 수도권은 제외.
-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입주 기업 완화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해 최적의 경제자유구역 집중 지원 필요.



지방자치권한 강화

- 인천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양수산청, 중소벤처기업청, 노동청 등 경제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지방 이양 필요.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경영에 인천광역시의 참여 보장 및 인천 소재 공기업의 지역과 상생 발전 방안강구.
-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원 지방 이양 및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 실현과 인천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의 유지 필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 송도 바이오클러스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67개의 바이오 기업이 대학, 연구소, 병원 등과 연결되어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K-바이오 랩 허브를 통한 대기업·중견·중소·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하는 바이오 생태계 조성.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통한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임상-생산 밸류체인 완성. 바이오 생산장비 및 원부자재 국산화로 남동 산업단지의 제조, 생산기업 연계.
- 바이오 산업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기술, 생산장비가 필요하고 연구, 상품 개발 최종 단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바 정부의 지원 시스템 마련 및 인프라 구축, 규제프리존 적용이 필요.



항공정비산업 및 공항경제권 구축

- 정부는 2021년 8월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인천공항을 해외 복합 MRO업체 유치 등으로 특화해 육성하기로 발표. 인천공항은 IAI 항공기 개조사업 유치, 아틀라스 항공기 중정비 센터를 유치하여 MRO 허브로 도약할 준비중.
- 항공정비산업은 고부가가치 기술집약적 사업으로 최근 위축되고 있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사업 다각화, 기술고도화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임.
-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공항 및 항공산업이 조속히 회복되고 인천공항 항공 정비단지가 조속히 조성되도록 정부의 제도 개선과 관련 법안의 제·개정 필요.



수소에너지 기반 탄소중립도시 실현

-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라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소경제 활성화가 중요함.
- 인천은 SK인천석유화학과 수도권매립지를 통해 부생·바이오수소 생산 기반을 갖추었으며 수소 핵심장비 국산화와 수소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소산업 집적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임.
- 수소산업 기반여건과 입지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항만과 공항, 수도권이라는 대규모 배후 수요처가 있는 인천의 수소산업 클러스터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 관세 유보, 조세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을 보장하는 자유무역지역은 대체로 항만과 공항 인근 지역이 지정됨.
- 인천항은 다른 항과 비교해서 자유무역지정 면적이 작으며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규모 역시 낮은 수준이므로 정부의 형평성 있는 지원 필요.
- 인천항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항만시설 배후단지 공공개발 강화 및 해양산업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및 환경 개선

- 인천지역 산업은 수도권 규제 정책 등으로 대기업이나 신산업 유치에 어려워지면서 조립·가공 위주의 전통산업 기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점차 노후화·영세화 되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음.
-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은 대학생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중소기업 입사를 꺼리는 중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근로자들이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소재 업체들에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산업단지 환경 개선 정책 필요.



전통 제조업 지원

- 인천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이 증가하고 제조업이 감소하는 추세.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제품 수명주기가 단축되는 등 제조업 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음.
- 산업도시인 인천은 제조업이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환경 변화에 따른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 등 혁신형 제조로 거듭날 필요가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전통 제조업이 생존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조 혁신 기업에 대한 정부의 인력, 기술, 금융 지원 필요.

2021 인천경제주권 어젠다 세부내용

I. 도시 경쟁력 강화

1. 수도권 규제 완화

1. 현황 및 문제점

□ 수도권 규제 지속으로 인한 성장 저해

- 인천 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고시에 따르면 정부의 수도권 규제에 변화가 없어 향후 20년간 계속해서 공장 입지, 도시 개발 제한 등의 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등 성장에 필요한 인프라와 잠재력을 갖추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라는 외부 요인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어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음. 전국 대비 인천의 **GRDP** 비중은 감소 추세.

※ 2016년 4.86%, 2017년 4.81%, 2018년 4.66%, 2019년 4.67%

□ 광역 단위 경제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내 원도심, 접경지역 등 발전이 지체되어 있고 재정적으로 취약하며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 내 불균형 문제 역시 고려되어야 함.

- 글로벌 경쟁의 단위로 개별 도시보다는 일정 규모를 갖춘 메가시티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이분법이 아닌 초광역 경제·생활권을 통한 광역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전면적인 개정 필요.

□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에 대한 수도권 규제

- 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 시 세제, 보조금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세제 감면 등이 제외됨.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며 리쇼어링을 추진중에 있음.
- 2020년 국내 유턴기업 18개사 중 인천으로 복귀한 기업이 4개사로 전국의 시도중 가장 실적이 좋았던 것은 기업들이 국내 복귀 시 각종 지원보다 인력수급, 입지 등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나타냄. 정부의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유턴기업보다 해외진출 제조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리쇼어링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 폐지 필요.

□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투자 필요

- 강화군, 옹진군 등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성장관리 권역으로 분류되어 과밀억제권역에 비해 규제가 다소 완화된 수준이나, 원칙적으로 개발이 제한받기는 마찬가지임.
- 정부의 2020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도 강화군, 옹진군은 교통인프라 확충, 정주여건 개선 사업만 있어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음.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신성장 동력 마련 및 투자 필요.

2. 건의 내용

- 국가경쟁력이 광역도시권의 경쟁력에 따라 좌우되는 등 국제적으로 도시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한국뿐 아니라 동북아 혁신거점으로서 수도권 역량 강화를 위해 전면적인 수도권 규제 폐지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전면적인 재개정을 통한 불균형 해소 요청.

3. 실천과제

- (1)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 재개정
- (3) 국내복귀기업 수도권 규제 완화
- (4) 강화·옹진 등 접경지역 중첩 규제 완화

2. 인천경제자유구역 역차별 해소

1. 현황 및 문제점

-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규제자유특구 배제로 인해 각종 규제 적용
 - 정부의 「규제 프리존(규제자유특구)법」은 신산업 성장을 위해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신기술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국내 기존 규제에 대한 획기적인 완화 조치가 가능.
 -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바이오헬스 등 첨단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되고 있으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의 이점과 규제프리존의 특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전면 개정 필요.
-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인센티브 적용 제외
 -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첨단 기술·제품 및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도 외국인투자기업과 유턴기업에만 적용했던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확대됨.
 -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산업인 바이오헬스 산업과 관련된 국내 첨단 기술·제품 기업이 입주해도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되어 신성장 동력 창출과 혁신성장 지원 역할이라는 경제자유구역의 취지와 위반됨.
- 투자확대 유도를 위한 정책 변경 필요
 -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는 정체상태이며 이미 진출해 있는 외투기업이 기존 설비를 대체해 투자를 하는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투자를 확대하기에 제약이 많으므로 외투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공장시설의 신설·증설, 고용 창출 기준요건에 대한 기준 완화 필요.
 - 보호무역주의 시대를 맞아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 입주 조건을 완화하고, 외국기업 만큼 입주 혜택을 주는 등 경제자유구역 정책 변경 필요.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제자유구역 지원

- 경제자유구역은 광역 인프라(국제공항, 항만)를 갖춘 곳을 선택해 집중 지원한다는 취지로 출발하였으나 현재 9개 시·도에 29개 지구가 지정되는 등 계속 늘어나는 상황임.
- 별다른 차별성 없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 중복·과잉 지정되면서 입지 경쟁력 부족으로 개발이 부진하고 입주율도 저조한 사례가 많으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건의 내용

-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비즈니스 프론티어로 성장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과 인천지역 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역차별 하는 법, 제도의 개선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제자유구역 지원 요청.

3. 실천과제

- (1) 지역특화발전 역차별 하는 「규제 프리존(규제자유특구)법」 전면 재개정
- (2) 인센티브 역차별 하는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 전면 수정
- (3)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지원 역차별 해소
- (4) 유명무실한 경제자유구역 재조정 및 추가 지정 재고

3. 지방자치권한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지방 이양에 따른 분권 강화

- 국세청,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조달청, 해양수산청, 중소벤처기업청, 노동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별지방 행정기관이 각 지방에 설치되어 있음.
-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에는 전문성, 경제적 효율성, 지방정부의 집행성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기 어려운 사무를 다루는 기관도 존재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지역 주민에게도 이익이 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그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강화에 도움이 될 것임.

□ 인천 소재 공기업에 대한 경영권 참여 보장

- 인천에 소재한 주요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는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지역 상황을 이해하는 인사가 경영에 참여하여 지역 친화적 의사 결정이 필요함.
-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 및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추천권을 확대하여 인천광역시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가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방안 강구.

□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권한과 재정의 지방 이양

- 중앙권한과 자치단체 간 사무 재배분이 단순 집행사무 위주 이양으로 추진되어 지방의 실질적 권한이양 미흡하므로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권한을 기능 중심으로 지방 이양 추진.
- 국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지방세 비중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제약되므로 국세·지방세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세제 및 세정의 합리적 개선, 지방세 비과세 감면을 관리, 지방세의 수입 징수율 제고 등 지방세입 확충기반 강화.

□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방지

-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근거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 이미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인천의 6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겨졌으며 인천의 공공기관 수는 7개로 타 시도와 비교해 매우 적은 수준.
- 현재 인천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은 해양, 항공, 환경 관련 기관으로 인천시가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핵심분야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바, 지역 사회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2. 건의 내용

- 지방이 경쟁력을 갖출수록 국가의 경쟁력 역시 강화되는 만큼 지역 특성에 맞고 지역 주민과 밀착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과 공공기관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지대한 만큼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공공기관 운영 요청.

3. 실천과제

- (1)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 (2) 인천 소재 국가공기업 경영권 참여 보장 및 지역과 상생 발전
- (3) 중앙에 집중된 권한 및 재원의 과감한 지방 이양
- (4) 인천 소재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 재고 및 인천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인천 유치

II. 미래 성장기반 육성

1.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 「K-바이오 랩허브」 조기 구축

-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 바이오 산업과 신약·백신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국내 바이오 창업기업을 빠르게 육성하기 위한 「K-바이오 랩허브」 사업에 인천이 선정됨.
- 인천 송도 지역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국내 대표적인 바이오 앵커 기업과 함께 병원, 연구소 등이 집약되어 있어 산·학·연·병 협력 네트워크가 중요한 「K-바이오 랩허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통과되고 조성공사와 운영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필요.

□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 지원

- 바이오의약품 생산 확대로 생산인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제약사들은 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력양성을 기피. 생산 능력과 인력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바이오 의약품 생산·개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바이오의약품 공정·개발 전문인력 양성센터가 인천에서 추진되고 있음.
- 바이오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이 뒷받침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산업계 수요를 충족할 바이오 인력이 양성되어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임상, 생산의 밸류체인 구축되도록 정부의 지원 필요.

□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사업 지원 확대

- 바이오 원부자재는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역 블록화, 독점화 등으로 언제든지 바이오 기업들의 안정적인 원부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를 통해 공급 리스크를 낮추고 공급을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음.

- 인천지역의 바이오산업은 송도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지역 기업으로의 연계가 필요하며 인천의 중소기업은 바이오 원부자재 공급기업으로 전환 시 사업 다각화와 새로운 수요처 확보 가능. 인천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지원 사업이 지속되고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확대 요청.

□ 헬스케어 산업 규제 완화

-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높은 수준의 의료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시장진출 규제가 성장을 막고 있으며 원격 의료행위 제한, 소비자직 접의뢰(DTC) 유전자 검사 항목 제한, 데이터 통합 활용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신기술, 투자유치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열위.
- 강원도가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것처럼 헬스케어 산업의 인프라가 갖추어진 인천시를 헬스케어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하여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진단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요청.

2. 건의 내용

- 바이오헬스 산업은 정부에서도 3대 신산업으로 지정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과 상품 개발, 최종 단계까지 상당한 시간이 많은 비용이 소요됨. 바이오 기업과 대학, 연구소, 병원 등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인력 양성과 원부자재 국산화까지 연계되는 최적의 지역인 인천이 글로벌 바이오 도시로 조성되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요청.

3. 실천과제

- (1) 「K-바이오 랩허브」 조기 구축 통한 대기업·지역기업 상생하는 바이오 생태계 조성
- (2)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임상-생산 밸류체인 구축 지원
- (3) 바이오 생산 장비 및 원부자재 국산화 및 연계 지역기업 지원
- (4) 헬스케어 산업 육성 위해 규제프리존으로 적용

2. 항공정비산업 및 공항경제권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 항공정비 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조성

- 항공정비 산업(MRO)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크며 성장 잠재력이 높고, 항공부품·제작 등 연관 산업 성장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나 해외 의존도가 높아 국내산업 육성이 필요.
- 인천공항은 이미 IAI 항공기 개조사업 유치, 아틀라스 항공기 중정비 센터를 유치하여 MRO 허브로 도약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인천공항은 이미 항공정비를 위한 예정부지를 확보하고 있음. 항공정비 산업 특화단지가 조속히 지정되고 특화단지 조성에 정부의 재정적 지원 요청.

□ 항공정비 인력 육성

- 항공정비 산업은 신규 고용창출 측면에서 효과가 높은 산업이며 항공정비 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으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
- 초급 기능인력부터 고급 기술자까지 다양한 인력이 필요한 항공정비 산업 특성에 맞게 고교생부터 전문가까지 단계별 교육 과정이 운영되어 인천형 MRO 인력이 양성되도록 정부 지원 필요.

□ 항공정비 산업 육성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 현행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설립 목적과 사업범위가 인천국제공항의 개발 및 운영으로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관련 산업의 발전이나 주변 지역 개발에 참여할 수 없음.
- 코로나19로 인해 인천국제공항과 관련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아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국제공항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정비 산업이나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 공항 연계 시설 개선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필요.

□ 인천국제공항 중심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공항경제권 구축

- 세계적인 공항들은 인근지역에 대규모 복합리조트, 비즈니스 지구, 첨단산업, 물류, 금융 등 관련 산업체를 유치하여 성공적인 공항경제권을 만들어가고 있음. 공항경제권은 공항의 항공운송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항 중심의 산업생태계이자 경제권역으로 인천국제공항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지역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면 공항경제권의 조성이 필수.
- 인천은 송도,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 인천항, 13개의 산업단지 등 최고의 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므로 공항과 인천지역 산업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상생 발전하는 공항경제권이 형성되도록 정부의 지원 필요.

2. 건의 내용

-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인천국제공항 및 항공산업이 조속히 회복되고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항공정비 산업 특화단지가 조속히 조성되고 관련 인력의 양성과 공항경제권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정 요청.

3. 실천과제

- (1) 항공정비 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조성
- (2) 항공정비 인력 교육·훈련 기반 조성
- (3) 항공정비 산업 육성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 (4) 인천국제공항 중심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공항경제권 구축

3. 수소에너지 기반 탄소중립도시 실현

1. 현황 및 문제점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분산형 전원 확대 정책 추진
 - 정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을 축소하여 2030년까지 석탄발전비중을 30% 이하로 축소 추진 중이며 그 대안으로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함.
 - 수소 연료전지 등 분산형 전원 확대는 탄소배출 저감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에너지의 근거리 생산/소비로 효율성을 제고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
- 인천은 대규모 수요처와 생산 기반을 동시에 갖춘 도시
 - 인천 수소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서구에 수소 생산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SK인천석유화학에서 생산되는 부생 수소와 수도권매립지의 바이오수소, 수소생산 기업 집적을 통해 인천뿐 아니라 수도권에 대량의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됨.
 - 인천 수소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바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통과되고 수소산업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필요.
- 수소 모빌리티 확대와 이에 필요한 수소 인프라 구축
 - 수소생산-저장-운송-활용이라는 수소산업 밸류체인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승용차, 버스, 트럭(트레일러, 덤프, 믹서), 항만장비(야드 트랙터, 지게차)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의 확대가 필요.
 - 수소 모빌리티의 연료 공급을 위한 충전 인프라는 현재 초기 단계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연료 공급을 위해 기존의 배관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조기에 수소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수소 에너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
 - 수소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원이지만 안전성에 대해 우려의 시선이 있음. 수소충전소와 수소연료발전소는 보급이 확대되고 있어 수소설비 시공, 저장·운송, 유지관리 등 수소산업 전 주기에 걸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필요.
 - 공공기관 수소에너지 의무비율 설정 및 상향, 연료전지 전환 의무 부여 등의 정책을 강화하고, 민간 부문은 공동주택 신축 시에 기존 보일러 설비를 대체 가능한 건물용 연료전지를 설치토록 인센티브 제공 및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관련 제도 정비 필요.

- 전력·에너지 생산기지의 인천 집중 문제 해소 및 탄소배출 체계 개선
 - 인천은 영흥화력발전소 6기를 비롯해 LNG 발전소를 통해 수도권 전력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인천시는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을 발표하면서 영흥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기반을 마련. 인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수도권 전력 공급이 분산되도록 정부의 정책 전환 필요.
 -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전환이 필요하며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로 적극 전환할 필요가 있음.

2. 건의 내용

- 탄소중립 실현의 주요 수단인 수소에너지의 활용 제고를 위해 연료전지 등 분산형 전원 도입 및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며 수소 공급 인프라 확대 요청.
- 일상 생활에서 수소 사용의 편의성과 유용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속 연료전지 보급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에 대한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정책과 인센티브 제공 확대가 필요.

3. 실천과제

- (1)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분산형 전원 체계 구축
- (2) 수소 모빌리티 확대 및 수소 공급 인프라 구축
- (3) 생활 속 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 (4) 전력·에너지 생산기지의 인천 집중 문제 해소

Ⅲ. 산업 경쟁력 강화

1.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및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 인천항은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항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배후 인프라 조성이 지체되고 있으며, 이는 인천항 이용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져 인천항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
- 아암2단지 및 신항배후단지는 수요, 기능, 인프라 면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선제적으로 전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 무역진흥, 국제물류의 활성화 및 지역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기반 조성 시 형평성 있는 정부 지원

- 부산항, 광양항 등은 터미널과 배후단지가 준공 전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항만경쟁력이 강화됨. 인천항은 물동량이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배후단지 및 컨테이너 터미널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항만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
- 항만배후단지 조성시 정부재정 부담률은 인천항의 경우 25% 수준이나, 부산항 50%, 평택항 75%, 광양항은 100%로 인천항 지원비율이 가장 낮음. 이는 인천항 임대료 증가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므로 정부의 형평성 있는 지원 필요.

□ 항만시설 배후단지의 공공개발 강화

- 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설립 취지에 맞게 항만공사를 통한 항만시설 배후단지 개발 필요.
- 항만 배후단지는 인천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시설이므로 입주기업이 인천항과의 연계성이 약화되지 않고 입주기업의 부담을 낮춰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항만개발 계획, 실시 필요.

□ 해양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인천해양대학 설립

- 인천은 항구와 바다, 풍성한 섬 등 해양도시라는 명성에 무색하게 해양 관련 고등 교육기관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인재가 유출되고 있으며 이는 해양도시인 인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완화하여 국립인천해양대학 설립 등 인천에서 대형 상선의 항해사·기관사 등 전문성을 갖춘 고급 선원과 해기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필요.

2. 건의 내용

-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인천항은 신항 개항과, 인천항신 국제여객터미널 개항 등을 통해 환황해권 물류 중심지로서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인프라 조성이 지체되고 있음.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이 조속히 확대 지정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인천항이 발전하도록 정부의 지원 필요.

3. 실천과제

- (1)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및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 (2) 인천신항 1종 항만배후단지 공공개발 추진 및 형평성 있는 정부 지원
- (3) 항만시설의 공공개발 강화
- (4) 해양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인천해양대학 설립

2.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및 환경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노후 산업단지 및 입주업체 환경개선 사업 지원

- 인천지역 산업은 수도권 규제 정책 등으로 대기업이나 신산업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조립·가공 위주의 전통산업 기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점차 노후화·영세화되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음.
-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은 대학생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중소기업 입사를 꺼리는 중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들이 산업단지 소재 업체들에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 정책 필요.

□ 산업단지가 스마트 제조혁신과 산업문화공간의 거점이 되도록 지원

- 남동국가산단은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지정되어 노후화된 산단 기반시설을 디지털로 통합 관리하여 친환경 산업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프라를 마련. 산업단지 내 공장 간, 산·학·연 간 데이터와 자원을 연결·공유·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등 산업단지가 스마트 제조혁신의 거점이 되도록 지원 필요.
- 남동국가산단은 노후 산업단지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산업문화공간 대개조 사업을 계획 및 추진 중에 있음. 인천시에서 추진중인 산업단지 내 문화·예술 체험공간, 협업공간, 생태탐방로 조성 등은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바 국비 지원 요청.

□ 부평미군기지 이전부지(공여지)에 첨단지식산업단지 유치

- 부평미군기지 이전 부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에 의거 수도권 규제를 받지 않고 공장을 신설할 수 있음.
- 부평미군기지 이전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연구개발시설이나 첨단지식산업단지를 유치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건설적인 활용 방안 필요.

- 4차 산업혁명시대 맞아 연구개발 인력양성 차원에서 국립인천과학기술원(INIST, Incheo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설립
 -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할하는 특수대학으로 과학기술 발전 및 이공계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함. 또한 연구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어 학비가 저렴하고 장학 혜택이 풍부함.
 - 현재 과학기술원은 광주, 대구, 울산, 대전에서 운영되고 있어, 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에는 부재함.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지역 산업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인천과학기술원 설립 필요.

2. 건의 내용

-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전진기지이자 제조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 온 산업단지가 인공지능과 데이터와 결합한 스마트 제조 혁신의 거점이자 근로자 친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필요.

3. 실천과제

- (1) 노후 산업단지 및 입주업체 환경개선 사업 지원
- (2) 산업단지가 스마트 제조혁신과 산업문화공간의 거점이 되도록 지원
- (3) 부평미군기지 이전부지(공여지)에 첨단지식산업단지 유치
- (4) 4차 산업혁명시대 맞아 연구개발 인력양성 차원에서 국립인천과학기술원 (INIST, Incheo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설립

3. 전통 제조업 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 전통 제조업의 사업 재편, 다각화 지원

- 산업도시인 인천은 여전히 제조업이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체의 절대 다수가 금속가공업, 기계장비업, 자동차 부품제조업 등 전통제조업에 속해 있음.
- 자동차 산업이 기존의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차로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성차 제조사도 친환경/미래차 관련 기술 개발 등 사업구조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부품 제조사는 신산업 부품개발, 인력양성 등 사업구조 전환에 필요한 어려움이 있으며 탄소중립 정책 대응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임.
- 금속가공업, 기계장비업, 자동차 부품제조업 등 전통 제조업이 지속 생존할 수 있도록 사업 재편, 다각화에 따른 제도적, 재정적 지원과 CO2 배출 저감,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 등 기술 개발 지원 필요.

□ 소재·부품·장비 실증화 지원센터 조기구축

- 남동국가산업단지에 구축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실증화 지원센터」는 산단 내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 남동산단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소부장 분야 기업은 8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센터는 신규 기술 실증화 및 상용화, 원천기술 개발, 국제 협력 지원, 기업 맞춤형 해외기술 도입 등 소부장 업체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소재·부품·장비 실증화 지원센터」가 조기에 구축 되도록 정부의 지원 필요.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되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역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음. 한편 청년 구직자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 역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청년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해 인력난과 구직난 개선.
- 물류비 절감(통행료 부담 경감) 위한 광역교통망 국비 건설
 - 만성적 교통 혼잡으로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경인고속도로는 지하화를 통해 고속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물류비용 감소가 필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국토교통부의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 선정된 만큼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통과되고 국비 조기 지원 필요.
 -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12개 구간중 인천-안산 구간은 유일하게 착공조차 못하고 있음. 인천-안산 구간은 수도권과 배후단지 물동량을 인천신항과 인천공항으로 연결하는 핵심 물류 인프라이므로 인천-안산 구간의 조속한 착공과 수도권 제2순환선(인천-김포)과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 필요.

2. 건의 내용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전통 제조업이 생존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조 혁신 기업에 대한 정부의 인력, 기술 등 지원 필요.

3. 실천과제

- (1) 전통 제조업의 사업 재편, 다각화, 탄소중립 경쟁력 강화 지원
- (2) 소재·부품·장비 실증화 지원센터 조기구축
- (3)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 (4) 물류비 절감(통행료 부담 경감) 위한 광역교통망 국비 건설